

신남북경협 시대의 개막: 전망과 과제*

양문수**

I. 최근의 남북경협 여건

1. 북미정상회담과 남북경협여건의 변화

지난 6월 12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그간 요구해 왔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북한 비핵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사실상 수용했기 때문에 향후 대북 제재의 완화/해제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제재 완화/해제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않으며, 향후 후속회담 및 후속조치의 추이에 따라 단계별 해제 시점과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북미정상회담 자체가 성사되었고, 공동성명에서 북미가 비핵화, 관계정상화라는 방향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더욱이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연동시켰다는 점 자체는 남북경협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여건 변화를 의미한다. 즉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 자체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2. 최근의 한반도 정세 급변과 남북경협 여건 변화

다만 시야를 좀 더 넓히면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즉 올해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 한 번의 북미정상회담, 세 번의 북중정상회담 등 연일 쏟아지는 메가톤급 뉴스에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지만 종착지는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특성이 있다.

물론 남북한, 미국, 중국 등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존재한다.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에 최

* 이 글은 2018년 6월 28일(목)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과 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msyang@kyungnam.ac.kr

종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이 여정의 미래에 대해 낙관과 비관의 두 대척점 사이에 있는 상당히 긴 스펙트럼 내에서 다양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러한 목표에 도달한다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일/북중러 대립구도가 소멸하고 동북아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인데 특히 북한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도 친하게 지내는 상황으로 바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제 어엿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로서 결국 북한이 이른바 보통국가 또는 정상국가로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남북관계도 크게 변할 것인데 남과 북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당분간은 혹은 상당히 오랜 기간은 평화 공존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리고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과거와는 그 성격, 내용, 규모, 수준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확대/발전한 새로운 남북경협이 펼쳐질 것이다. 이른바 새로운 남북경협시대의 개막이다.

II.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1.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당분간 남북경협의 향배를 좌우할 핵심변수는 뭐니 뭐니 해도 제재이다. 북핵협상 결과에 따른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해제 시점 및 범위/수준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크게 보아 양자 간 제재와 다자간 제재로 구분된다.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여러 차례 관련법의 제정, 개정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해 총 14개의 국내법을 통해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취하는 사유는 △자국안보에 대한 위협, △테러지원, △비시장경제(공산주의), △대량살상무기 및 핵무기 확산, △인권문제 등 5개의 사유이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2016.1) 이후 대북제재강화법(2016.2)을 발효시켰다. 이는 사실상의 전면 금수 조치로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성격도 존재한다.

국제사회(유엔)의 대북 제재는 미국의 대북 제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5차 핵실험(2016.1)을 기점으로 그 성격과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종전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사치품만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6년 1월 이후 북한경제 전반을 타격 대상으로 하는 제재로 변화했다.

<표 1>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주요 내용(2016. 1 이전)

해당 법규	제재 사유			
	안보위협	공산주의(비시장경제)	테러지원국	WMD 확산
대외경제 비상조치법	포괄적 자산동결			해당기업 자산동결
수출관리법	수출제한	수출제한	수출제한	해당기업 수출입제한 (미사일확산)
무기수출 통제법	군수품목 거래금지		군수품목 거래금지	1.해당기업 수출입제한(미사일확산) 2.원조(인도지원 제외), 군수품수출, 국제 금융기구·美은행 금융지원 금지 (핵확산·핵실험)
대외원조법		미국·국제금융기구 원조금지	미국·국제금융기구 원조 금지	
수출입 은행법		수출입은행 보증·보험·신용금지		수출입은행 보증·보험·신용 금지(핵확산·핵실험)
브레튼우즈협정법		IMF 원조금지	IMF 원조금지	
국제금융 기구법			국제금융기구 원조 금지	
무역법		정상교역관계·일반특혜관세 거부	정상교역관계·일반특혜관세 거부	
무역제재 개혁법			대북 상업수출 지원 금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해당기업 군수품·이중용도품목 수출, 미국 정부 조달계약 금지
대외활동 수권법	채무경감 금지		미국 원조 금지, 채무경감 금지, 수출입은행 원조·차관·신용·보증 금지	핵관련 장비·연료·기술 대북이전시 수출입 은행 기금사용 금지(핵실험)

주 :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매우 단순화시켜서 정리

자료 : 임수호, “제재 완화 단계별 남북경협 추진방향,”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 발표자료, 2018.5.24
를 약간 수정

<표 2>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주요 내용(2016. 1 이후)

	2270호 (2016. 3.)	2321호 (2016. 11.)	2371호 (2017. 8.)	2375호 (2017. 9.)	2397호 (2017. 12.)
북한의 수출	- 석탄, 철, 철광석 수출 금지(민생은 예외)	- 석탄 수출 연간 4억 달러 상한 (예외조항 삭제) 아연, 동, 니켈 등 기타 주요 광산물 수출 금지	-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등 수출 전면 금지 수산물 수출 금지	- 섬유의류 수출 금지	- 식용품, 농산물, 목재, 토석류, 선박 기계류, 전기기기 등 수출 금지
북한의 수입				- 북한의 원유도입량 동결(연간 400만 배럴) - 북한의 석유제품 도입량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	- 북한의 석유제품 도입량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 -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금속 수입 금지
금융	- 북한 내 외국 금융기관 폐쇄 및 거래 금지 - 북한 금융기관 해외지점 폐쇄 및 거래 금지	-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사적 금융 지원 금지			
기타	- 북한과의 수출입 화물 검색 의무화		- 북한과의 신규 합작 금지 - 북한 해외노동자 규모 동결	- 북한과의 모든 합작 중단. 기존 합작기업 120일 내 폐쇄. - 계약 만료 해외노동자 계약 연장 금지	-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 북한 영해 조업권 구입 금지

자료 : 김석진, “북한경제 현황과 전망,” 미발표자료, 2018.5.3을 다소 수정

Ⅲ. 제재 해제 및 남북경협 전망: 3개의 시나리오에 의한 접근

1. 현재의 대북 제재 유지시

현재의 대북 제재가 완화/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남북한 간에 실행할 수 있는 경제협력은 거의 없다. 남북간 체육에는 예술 문화, 종교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가 대중을 이룰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도 이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경제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업은 남북한 산림협력 사업이다. 즉 북한의 민둥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녹화사업으로서 실제로 지난 6월부터 남북한당국은 철도 및 도로 분야와 함께 산림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소규모 인도적 지원 및 개발지원 사업도 남북한 당국 간에 협의는 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관료, 기업인, 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식공유사업(KSP)도 북한의 경제개발 역량 강화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기업인에 대해 시설점검 목적의 방북을 허용할 수도 있고, 일반 물자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의 재개·협의를 위한 남북주민간 접촉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

2. 대북 제재 소폭 완화 및 일시 유예시

이는 유엔 제재 결의안 2270호(2016.1)부터 2397호(2017.12)까지 5개의 결의안이 단계적으로 해제되는 상황 혹은 일거에 해제되어 2270호 직전의 상태로 회귀한 상황을 상정한다. 그러면 한국은 현재 중단 상태의 기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일반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 등 중단된 기존 사업을 단계적으로 혹은 한꺼번에 재개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한 간에 신규 경제협력사업을 논의해 볼 수 있다. 10.4 공동선언을 비롯해 기존에 남북 간에 논의·합의되었던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 및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북측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북측의 개발 수요 또는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남북 간 협의·조정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대북 신규사업, 예컨대 북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소규모 협력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다. 이 단계에까지 오면 이른바 신남북경협 시대가 개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대북 제재 대폭 완화·해제시

이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대폭 완화·해제되어 남북경협에 대한 각종 제도적 제약요인이 해소되는 상황이다. 남북경협의 제약요인 혹은 리스크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이다. 즉 제도적 제약요인과 물리적 제약요인이다. 후자인 물리적 제약요인은 주로 인프라 부족 문제, 물자 부족 문제인데 이들은 북한이 외부세계와의 경협을 통해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전자인 제도적 제약요인이고 이는 제재의 완화/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크게 보아 △북한의 국제금융시장 접근 차단(혹은 북한의 국제규범 미준수), △전락물자 반출 문제(설비의 대북 반출 곤란), △판로 문제(북한산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 곤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현실세계에서는 이들 제약요인들이 북핵협상 결과에 따라 순차적/단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 제약요인이 압축적으로 해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제약 요인의 해소에 따라 한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간다. 그런데 그 양과 질이 종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른바 새로운 남북경협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진행이다.

IV. 신남북경협시대의 핵심 요소

1. 북한: 경제성장 본격화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점은 달리 보면 대북 제재가 거의 다 해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 북한은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7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트남식 모델로 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얼핏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우선 베트남 모델과 중국 모델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통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이행)은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이른바 빅뱅 또는 급진주의 모델(구소련/동유럽)이고, 또 하나는 점진주의 모델(중국/베트남)이다. 그런데 중국/베트남은 공산당이 몰락한 뒤 새로운 정치세력이 체제전환을 추진한 동유럽/구소련과는 달리 기존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공산당의 주도로 개혁개방/체제전환을 추진했다. 즉 중국/베트남 모델은 정치적 제도 변화 없이 경제적인 제도 변화를 추구해 고도성장을 달성한 모델이라는 것이 최대 특징이다. 따라서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북한이 선호하는 모델이다.

다만 조금 더 정밀하게 보면 베트남 모델과 중국 모델이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대외개방의 면에서 보면 베트남은 중국과는 달리 외부자본, 특히 해외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중국은 주로 국내저축과 외국인직접투자로서 투자자금을 조달한 데 비해, 베트남은 주로 해외원조로 투자자금을 조달했다. 물론 베트남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해외원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베트남은 본격적인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과는 달리 상당한 인플레이션과 달러 라이제이션 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강대국이지만 베트남은 약소국으로서 중국은 ‘데탕트’ 무드 속 대외적인 여건이 충분히 개선된 이후인 1978년에 개혁개방에 착수해 1년 후인 1979년에 북미 수교가 실현된 반면 베트남은 중국보다 훨씬 불리한 대외적 관계 속에서 1986년에 ‘도이머이’에 착수해 무려 9년 후인 1995년에 북미수교를 실현할 수 있었다. 즉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객관적 여건 면에서 북한은 중국보다는 베트남에 가깝다. 사실 종전에 적지 않은 북한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한다고 하면 중국모델보다는 베트남 모델에 가까울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향후 북한이 취할 개발모델은 엄밀히 따지면 북한식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세습권력이라는 특성, △특수관계로서의 한국이라는 존재 등의 면에 중국/베트남과 여건이 상이하다. 결국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으로부터 추출된 여러 요소들에 대해 일부는 그대로 원용하고, 일부는 북한의 여건에 맞추어 변형시켜 이들을 북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조합/결합하는 것이다. 물론 그 조합/결합 방식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다.

2. 한국: 북한과의 경제협력 본격화를 통해 저성장 기조 탈피

앞에서 보았던 제재 해제 3, 4단계는 달리 보면 북핵문제 해결 및 북미관계 정상화로 인해 북한경제가 세계경제에 편입되고, 남북경협을 비롯해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북한경제가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상황이다. 우선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지원, 북일 수교 자금의 집행, 북중경협의 확대, 나아가 미·일·EU의 대북지원/투자 확대 등은 북한에 유입되는 자원의 확대를 의미한다. 또한 북한 스스로도 개혁개방을 확대 또는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남한경제는 북한지역이라는 새로운 경제영토를 확보할 수 있다. 향후 긴밀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분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상호 획득할 수 있다.

예컨대 그동안 한국기업의 GVC(Gloval Value Chain)에는 북한이 빠져 있었다. 하지

만 이제는 북한을 여기에 집어넣어 새로운, 특히 종전보다 훨씬 효율적인 GVC를 구축 가능하다.

한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 한-중간 및 한-베트남간 분업구조와 유사한 협력방식을 창출할 수 있다. 생산기지로써 활용함과 동시에 소비재/중간재 수출 시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협력이 중국이나 베트남과의 협력보다 더 유리하다.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다는 강점이 있다.

3. 국제사회: 대북 진출 러시

1) 미국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월 11일,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하겠다고 경제적 보상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어 13일에 북한에 대한 원조는 어렵겠지만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국의 민간자본이 북한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미국의 대북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전력망 확충, 인프라 건설, 농업 발전을 도울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 민간 투자의 구체적 분야까지 밝혀 눈길을 끌었다.

북한을 도우겠다고 했지만 이는 외교적 레토릭에 불과하고 식량과 에너지, 즉 식량 안보, 에너지안보라는 호칭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북한의 기간산업을 장악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나아가 향후 북한의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는 국면에 들어가면 금융, 교육, 의료, 법률 등 북한이 현재 가장 낙후된 분야의 하나인 서비스 시장도 개방이 되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 분야에 강점이 있는 미국 민간 자본의 진출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2) 중국

중국은 올해 세 차례의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7~8일 개최된 북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미 간에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면 미국보다 먼저 중국이 북한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는 보도도 존재한다.

또한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자국의 대외전략이자 광역경제개발전략인 일대일로 구상에 북한을 포함시켜 북중 연결 교통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중국은 2015년 일대일로 구상을 구체화시켜 발표할 때 북한지역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 핵문제 미해결이라는 당시 국제정세의 반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리커창 중국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서울-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고속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문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런데 향후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은 단순히 인프라 분야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수교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독점적 지위의 약화/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대북 지원/경협 강화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북중 경협은 기존의 경협과는 차원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향후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 하에 각종 개발지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민간 기업들도 북핵문제 해결,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 등 북한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을 배경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사실 그동안 중국의 대북 무역의 폭발적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대북 투자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실제로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이징-평양 노선 항공기는 텅텅 비어서 운행되었으나 북중정상회담 이후 대북투자 상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기업인들이 몰려들어 비행기에 빈자리가 없다고 한다.

3) 일본

북핵문제 해결은 북일경제협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북관계에서 북미관계보다 앞서가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뒤쳐지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북일관계 정상화 시점은 북미관계 정상화 시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일수교가 성사되면 수교 자금이 북한에 유입될 전망이다. 그 규모는 대략 100억~150억 달러로서 한은이 추정하는 북한 명목 GDP의 1/3~1/2에 해당되는 매우 큰 규모의 자금이다.

북일수교 자금은 현금이 아니라 원자재, 자본재 등 현물 공여, 각종 건설 및 서비스 제공 등의 형태로 몇 년간에 걸쳐 북한에 유입될 전망이다. 십 수 년 전만 하더라도 수교자금 집행의 수혜자가 주로 일본기업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이제는 유엔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으로 여건이 바뀌어 한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에도 상당히 문호가 개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기업으로서는 독자적인 입찰 참여, 일본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입찰 참여, 일본 및 제3국 기업까지 포함한 다국적 컨소시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참여를 추진할 수 있다. 한편 과거 2000년대에는 마에다(前田) 건설공업, 타이세이(大成) 건설, 시미즈(清水) 건설, 미즈타니(水谷) 건설 등 일본의 대형

건설회사와 함께 미쓰이(三井)물산,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이 북한 진출을 검토한 바 있다.

4) EU

북한과 EU와의 대외경제관계 정상화는 미국보다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EU는 현재 28개 회원국가운데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26개국이 이미 북한과 국교를 수립한 상태이다.

북핵문제 해결시 EU는 북한과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EU는 과거에 북한이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면 북한에 대해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북핵문제 해결시 EU의 대북 경제지원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북제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적지 않은 국가들이 제조업, 서비스업, 자원개발, 금융업 등 폭넓은 분야에서 대북투자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V. 쟁점과 과제

1.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성

이제 우리는 평소 꿈꾸어 왔던 것과 판이하게 다른 통일의 모습을 마주할지도 모른다. 4/27 판문점은 향후 남북한이 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해석도 있다. 어쩌면 통일은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남북 평화공존 기간을 거쳐야만 가능할 지도 모른다.

물론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가 청산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이 진전되면 남북한 간의 이질성이 완화되고 통일의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통일은 기본적으로 상대가 있는 게임임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로서는 우선 남북연합 단계로 가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북한은 Two Korea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설령 시간이 흘러 통일을 달성한다고 해도 통일은 민족주의와 순혈주의에 기반한 통일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세계화 시대의 통일, 즉 다양한 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주체들, 해외의 공공/민간 자금과 공존하는 통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핵문제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진출 러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특성 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새로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필요성

제재 해제 3, 4단계에 가면 한국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단계에서는 다른 나라 자본들도 북한에 대거 몰려들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을에서 갑의 지위로 변화한다. 한국은 오히려 Korea Passing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그 때를 대비해야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조건 하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적 문제의식이다.

최근의 남북경협 여건 변화 조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암묵적 전제/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예컨대 현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북한의 비정상국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을 초부터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해 북한은 이제 정상국가로 가려고 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 사회에 편입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바로 그 순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전제가 무너져 내려버리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향후 대폭 변화할 가능성 있는 남북경협의 여건, 제약조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남북경협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